與, 尹퇴진 로드맵 격론…친한 일각, 2차 탄핵표결 참여

친한 "탄핵에 준하는 하야"…친윤 "임기 단축 개헌부터"
14일 탄핵안 표결 의견 엇갈려…친윤은 "반대당론·불참"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우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6개월-1년 내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당 주류인 친윤계·중진 사이에선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가 쏠린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친한계 일각의 '조기 하야'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나 할 법한 이야기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그럴 바에는) 탄핵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장 180일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전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경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다, 야권의 탄핵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할지, 표결에 불참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14일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 친윤계 중진은 "탄핵안 관련 당론과 표결 참여는 의원총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한(비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비치는 모습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날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 등을 두고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담화는 당에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총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 尹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고발…탄핵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내란죄 고발 배경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김영록 지사 "한동훈, 완전 무개념 법조인"

"헌법에 없는 권한 행사 어이없어"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완전 무개념 법조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락가락 한동훈, 국민 배신하더니 국정에 대한 무개념 일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이 말하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며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발표 보니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지사는 "(한 대표가) 헌법에도 없는 권한 행사를 의기양양 떠드니 완전 무개념 법조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尹구속 시 직무정지 방법 있나"
주철현 "옥중 집무 못 막을 것…탄핵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두 한(韓)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언주 최고위원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두 한씨는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자 이같이 호응했다.

이 대표는 또 최고위원들에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 뿐"이라며 "존재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다가는 수렁에 빠져서 죽는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尹 지지율 17.3%…취임 후 첫 10%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5.0%)보다 7.7%p 하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